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향후 대한반도 정책

김국신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미국 민주·공화 양당은 오는 11월 4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 준비를 모두 끝내고 대장정에 돌입하였다. 민주당은 8월 25~28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버락 오바마(Obama) 상원의원과 조지프 바이든(Biden) 상원의원을 정·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였다. 공화당은 9월 1~4일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존 맥케인(McCain) 상원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세라 페일린(Palin) 알래스카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이번 대선은 민주·공화 양당 대결구도 외에도 흑백 대결, 남녀 대결, 세대간 대결 등 복합적인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 후보인 47세의 오바마 후보는 자신의 최대 약점인 외교·안보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교에 정통한 65세의 바이든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 한편, 올해 72세이고 베트남 전쟁영웅 출신인 매케인 후보는 힐러리 상원의원의 탈락에 낙심한 민주당원과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혁성향인 44세의 페일린 알래스카 여성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임명하였다.

민주당은 ‘미국의 약속을 새롭게 하며’(Renewing America’s Promise)라는 주제를 내세우고 전당대회를 진행하였다. 오바마는 8월 28일 ‘미국의 약속’이라는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노력과 헌신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상기시키고, 진정한 변화와 통합을 통해 미국의 지도력과 경제회복을 천명하였다. 그는 또한 매케인이 당선되면 ‘부시 3기’가 된다고 매케인을 부시 대통령과 동일시하는 선거공세를 펼쳤다.

한편, 공화당은 전당대회 주제를 ‘국가 제일주의’(Country First)로 정하고 베트남전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하여 5년간 포로생활을 겪은 매케인의 애국심을 부각시켰다. 매케인은 9월 4일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자기이익을 앞세우고 국가를 등한시하는 워싱턴의 낡은 정치문화에 대한 개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면서 강력한 변화를 통한 정권 재창출을 다짐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원들과도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우회적으로 부시 행정부와 차별화를 선언하였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양당 후보들의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이 무엇인가에 쏠리고 있다. 우선 양당 정강정책 모두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북한인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을 ‘광적’(maniacal)인 독재국가로 묘사하고 있는 공화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라는 조건을 명시하여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핵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를 불신하고 있는 공화당은 6자회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공화당 정강정책을 고려해 볼 때, 11월 대선에서 매케인 후보가 승리할 경우 북·미간 핵협상은 검증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도 북한 비핵화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북핵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종식’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북핵문제를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6자회담도 지속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기다 오바마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 대선과정에서 ‘김정일과의 대화’를 주장한 바 있고, 바이든 부통령후보는 ‘지한파’로서 북한문제에 관심이 많고 북한방문을 여러 차례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보좌관을 북한에 보내기도 했다. 따라서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기조는 보다 견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도 북한이 검증문제에 대한 6자회담 참여국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진통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하다.

한국과 관련된 정책만 짚어보면 공화당은 광적인 독재국가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을 가치 있는 동맹(valued ally)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그냥 한 문장으로 일본·호주·한국·태국·필리핀 등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양당의 정강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통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표출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공화당은 기존에 합의된 FTA에 대한 즉각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통한 미국 산업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수정을 명시하고, 국제적인 노동·환경 기준을 FTA 체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집권은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매케인과 오바마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거의 동률로 나타나 양당 후보는 박빙의 경합세를 보이고 있다. 초유의 흑백대결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이번 대선결과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예측이 어렵다. 그리고 선거결과가 한국의 국익에 미치는 영향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선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유지한 가운데 한·미 FTA에 대한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등을 도출할 수 있는 대미 외교력을 발휘하는데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다.

